

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김은영 의원

발의일 : 2022. 1.

1. 제안이유

-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,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이용대상자 및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등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이용신청, 이용의 승인, 운전자의 자격 등 (안 제7조~제10조)
- 라. 차량의 출고 및 입고,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(안 제11조~제13조)
- 마. 이의신청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제정 조례안은 하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5조제4호에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.

- 부서 검토의견으로, 공유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시장이 정하는 조항 신설요청(안 제3조2항) 반영
이용대상자의 범위에 “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조항” 삭제 요청을 반영함 (안 제4조)

※ 공유재산법령 관련 경기도 질의에 따른 회신 (행정안전부)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5조제4호에 따라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무상대부가 가능하며, 무상대부의 대상자는 「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1)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

- 본 조례 제정으로,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인 취약계층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되고,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희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천이 기대되며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-
- 1) 제2조(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)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(이하 “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
 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 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 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
 5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
 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7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 8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 9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 10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
 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- 나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12.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“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